

전북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 올 상반기 성과

‘문화강도 전북’ 위상 확고히 다졌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025년 상반기 문화·관광·체육·유산 전 분야에서 풍성한 성과를 거두며 ‘문화강도 전북’의 위상을 확고히 다졌다.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 이장석 국장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상반기 추진 성과와 하반기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문화예술 분야 성과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예술인 지원 확대와 도민 문화 향유 기회 증진에 주력했다. 상반기 동안 총 382명의 예술인에게 12억원의 창작활동비를 지원했으며, 전북예술인 복지재단을 통한 창작준비금 7억5,000만원과 예술 활동 증명 발급 지원 1,089건이 이뤄졌다.

공공 일자리 연계사업으로 51개 공연단체 384명이 참여해 143건의 공연을 진행했고, 예술·관광상에 선정된 6개 팀이 24회의 관광객 대상 공연을 선사시켰다.

문화공간 확충에서도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 구 도지사 관사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킨 ‘하얀 양옥집’은 개관 이후 8만 명 이상의 관람객을 끌어모으며 도심 문화 거점으로 자리잡았다. 완주, 익산, 고창

예술인 지원 확대 · 도민 문화향유 기회 증진 주력

관광 분야, 단순 방문에서 체류형으로 전환 박차

체육 분야에서도 성과 · 문화유산 가치 재조명도

하반기 ‘전주 문화올림픽 유치’ 향해 전력질주

이 문화도시 성과평가에서 우수도시로 선정됐으며, 통합문화이용권 13만 장 이상 발급과 ‘전북형 마을 문화 프로젝트’를 통한 문화자산 재발굴이 주목받았다.

문학 예술인회관과 대표도서관, 세계 서예 비엔날레 관은 상반기 착공에 들어갔으며, 시청자미디어센터와 도내 생활 문화시설 27개소 정비도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관광 분야 체류형 전환

관광 분야에서는 단순 방문 중심에서 체류형 관광으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했다. 군산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예비 국제회의지구’로 선정돼 국제회의의 산업 기반을 마련했고, 익산시는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로 선정되어 향후 4년간 20억원 규모의 관광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자전거 여행 공모에서는 남원, 김제, 완주가 선정돼 자전거길 중심의 체험 콘텐츠 개발이 본격화했으며, 고창 웰파크 시티는 ‘우수 웰니스 관광지’로 지정됐다. 전북은 전국 웰니스 평가 1위를 기록하며 국비 1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관광 인프라 확충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전주에는 연말 완공 목표의 통합관광센터가 들어서며, 전주 종합경기장 내 관광호텔 건립도 7월 중 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하반기에는 야간관광 자원 발굴을 위한 ‘전북 야행명소 10선’ 공모와 함께 전북의 미식·태권도·한옥 문화자산을 활용한 체험형 콘텐츠가 확대될 예정이다.

▲체육 분야 국제대회 성과

체육 분야에서는 국제적 성과와 생

활체육의 균형 잡힌 발전이 두드러졌다. 전북도청 컬링팀은 ‘세계주니어 컬링선수권대회’ 금메달로 한국 컬링 역사상 31년 만의 세계대회 우승이라는 위업을 달성했다.

생활체육에서는 문체부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20억원을 확보하고, 체육지도자 300여명이 1만6,000회 이상의 강습을 실시했다. 생애주기별 체육교실, 스포츠 강좌이용권, 주말 체육프로그램 등이 운영되어 38만여 명이 참여했다.

태권도 분야에서는 ‘2026 세계태권도 그랑프리 시리즈’, ‘2027 그랑프리 챌린지’ 유치에 성공하며, 무주 태권도원이 세계 태권도 중심지로 재조명받고 있다. 하반기에는 ‘글로벌 태권도 인재 양성센터’ 설립 예산 반영을 추진한다.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군산·진안·고창 등 시군의 생활체육시설 공모 선정으로 총 120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문화유산 가치 재조명

유산 분야에서는 전북의 고유문화와 역사를 미래 유산으로 승화하는 정책들이 집중됐다. 해양 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을 통해 국제 해양

문화 협력 기반을 마련했고, 국가·도 지정 유산 9건을 추가 발굴했다. 전라유학진흥원은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공정률 65%를 넘겼으며, 종교 평화 문화프로그램과 종교 문화 체험시설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고창 고인돌과 갯벌에서는 세계유산 축전이 열리고, 백제 역사 유적 지구 유네스코 등재 10주년 기념 행사도 다채롭게 준비 중이다.

▲하반기 문화올림픽 유치 집중

이장석 전북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올해 상반기, 전북은 문화예술 창작 환경 조성부터 체류형 관광 기반 확충, 국제대회 유치, 고유유산 보존까지 도정 역량을 집중해 왔다”며, “하반기에는 전주 문화올림픽 유치 기반 마련에 더욱 집중하는 한편, 새 정부 국정과제 수립 과정에서 전북의 문화 핵심 아젠다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문화가 도민 삶의 중심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과 투자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문화강도 전북’은 이제 세계 속으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 /이만호 기자

이차전지 활성화 방안 머리 맞대

전북자치도의회, 산업진흥간담회 열고 기업 애로사항 청취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0일 군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에서 이차전지 산업 진흥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차전지 기업 11개사와 전북 탄소중립순환경제협회, 전북도의회 문승우 의장(군산), 강태창(군산)·박정희(군산) 의원, 전북도청 기업유치지원실장 등 관계 공무원,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육성 추진 현황, 이차전지 기업유치 이행 상황, 이차전지 폐수관리 대책 등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특히 이차전지 기업들이 경영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도의회와 도 차원의 향후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와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현장을 둘러봤다.

도의회는 그간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특위를 구성해 국회와 산자부를 방문하는 등 전방위



적 활동을 펼쳐왔다. 그 결과, 지난 2023년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또한, 도의회는 전북도와 함께 △이차전지 기업들의 연구 및 생산 인력 확보 △정주 여건 조성 지원 △다양한 규제 혁신 시도 등을 통해 기업의 활발한 경영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새만금 이차전지 산업 계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적극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기업들의 원활한 경영, 온전한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전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군산시의회 상임위, 의원 발의 조례안 가결

군산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군산시의회 상임위원회가 의원들이 발의한 각종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는 군산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 법령 제정 및 조항 변경에 따른 관련 조항의 개정, 기본계획 수립 시 인공지능 기반 행정 구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 ‘군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임원과 이사회 운영에 대표이사를 추가로 명기하는 것이다.

경제건설위원회는 군산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시켰다. 군산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 의해 수결가결됐다.

이한재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군산시 농산물유통혁신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 및 직무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생산자단체·농업인의 의무 등을 담고 있다.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수립·시행, 민간협력기구 구성 등, 상담 등 지원사업과 교육 및 홍보사업에 대한 위탁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다.

다만,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해당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10조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 반영됐다. /군산=김민호 기자



‘JBCORECON 2025 포럼’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콘텐츠산업협회가 주최한 ‘JBCORECON 2025 포럼’이 10일 오후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조민호 전북콘텐츠산업협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석열 재구속… 민주 도당 “사필귀정”

“민주주의 파괴한 책임 져야… 내란세력 단죄, 헌정 질서 바로 세우는 길” 강조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새벽, 서울 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가운데, 헌정 사상 전직 대통령에 다시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다.

법원은 이날 6시간 40분간 이어진 영장심리심사를 거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3월 구속 취소로 석방된 지 124일 만의 재구속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10일 성명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내란세력의 단죄는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광훈 전북도당 부대변인은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국민 주권을 훼손한 자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사필귀정(事必歸正)의 결과”라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비상계엄 선포 문건과 관련해 특검의 수

사를 받아왔다. 특히 계엄령 모의 문건 작성 및 유포, 군 지휘부 동원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졌고, 전국 곳곳에서 법적 책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번 구속은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법적 운명을 가를 중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계기로 ‘국민주권 회복’과 ‘법치 회복’을 강조하며 본격적인 정치적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만호 기자

“박정훈 대령 항소 취하, 국민주권 정부의 정의 회복”

민주 도당 “항명죄 기소, 당시 권력의 외압에 의한 부당 조치

채상병특검팀이 정의·상식 회복할 수 있도록 진상규명 철저히”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은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박정훈 대령 항소 취하에 대해 “사필귀정(事必歸正)의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술지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진실이 바로 서고, 왜곡된 사실이 바로잡히고 있다”며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죄 기소는 당시

권력의 외압에 의한 부당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박 대령은 지난해 실종된 청년 해병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중, 임성근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그러나 이후 국방부가 입장을 번복하며 박 대령은 오히려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전북 남원 출신의 채상병 사건을 주

목해 온 전북도당은 “특검 도입을 세 차례나 거부한 윤석열 정권은 사건은 폐해 책임이 크다”며 “이번 항소 취하는 당시 정권의 공소권 남용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도당은 박 대령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국방부, 군 검찰 등 권력기관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면,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정의와 상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한편, 박정훈 대령은 10일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귀했다. /이만호 기자

‘돌봄통합지원법’ 준비

지역 실현 방안 논의

도, 복지정책 토론회 참여

전담 조직 등 제도 기반 강조

전북특별자치도는 10일 전북자치도의회 의원총회실에서 열린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준비를 위한 복지정책 토론회에 참여해, 제도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의 지역 실현 방안과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경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서양열 전북사회서비스원 원장, 박진희 우석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종섭 전북연구원 박사, 강병은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관 관장,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 등이 참여해 돌봄정책의 법적 기반과 인력·예산 구조, 지역 특화모델 개발 및 민관협력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토론회는 (사)전북희망나눔재단과 전북사회복지협의회,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에 지역 돌봄정책의 방향과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로 참석한 성이순 도고령친화정책과장은 “전북특별자치도는 고령화율 25.29%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초고령 지역으로, 복합적인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현재 7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도내 모든 시군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기반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광역단위 전담조직 설치 필요성 △총액인건비 제도 개선을 통한 지자체 인력 확보 △국비 지원 확대 등 제도 시행을 위한 핵심 과제를 제시하며, “통합돌봄은 공급자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정책이며, 도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한 실행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2개 시군에서 7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기술·예산지원형 모델을 운영하는 등 제도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왔으며, 하반기에는 미참여 시군 대상 공모, 조례 제정, 읍면동 실무자 교육 등을 통해 통합돌봄 기반을 더욱 체계화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지역 대학 경쟁력 강화

도, 제도 기반 마련 나서

도의회서 대학 학생 정원

조례 제정 위한 간담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는 10일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대학 학생 정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조례안에 대한 전문가 및 대학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정수 도의원을 비롯해 도내 대학 관계자, 교육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해 조례 제정 방향과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

전북자치도는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라, 대학 학생 정원 조정 특례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받은 상태다. 이번 조례는 이 권한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조례안에는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특성화학과를 지정하고,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대학이 신산업 분야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침